

단체 간 불협화음 조율할 '5·18 컨트롤타워' 절실

5·18 43주년
흔들리는 대동정신

<4> 분열 막을 구심점 만들어야

최근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와 시민단체가 극단으로 갈라선 것은 단체 간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이들을 규합할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명노근 전남대 교수부터 정동년 전 5·18재단 이사장까지 5·18의 목소리를 모아 주던 원로들이 하나둘 영면하면서 구심점마저 사라졌다는 것이다. 5·18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에는 5·18 단체들이 '진상규명' 한 목표를 뜻을 모았다면, 지금은 각 단체별 이권 다툼을 하느라 서로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5·18 관계자들은 각 단체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5·18 원로들 하나둘 영면하며 구심점 사라져 독단적인 행보 잇따라
"과거 진상규명 한마음 퇴색되고 단체별 이권싸움 심각" 지적 쏟아져
갈등 조율하고 타협과 논의 이끌도록 5·18기념재단이 적극 나서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그 중 5·18기념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단체별 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법단체는 5·18유공자들을 위한 회원 복지 사업에 집중하고, 대외 사업은 5·18재단이 도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대국민선언서' 이후 더욱 불붙었다. 이들 두 공법단체는 "당사자들이 직접 광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리로 특전사 단체와 화해 선언을 강행하고, '5·18피해 자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렸다. 이같은 독단적인 행보가 공법단체와 5·18재단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고, 서로 타협과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은 5·18 공법단체의 설립 목적에 대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각 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유공자·유족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명예선양·추모사업', '호국정신 함양·애국심 고취' 등으로 정해 두었다.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도 수익금은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에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공법단체의 제1목표는 '회원 복지'인데, 공법단체는 최근 5·18 유공자

가 고독사를 하는 와중에도 복지 사업에는 무관심하고 이권다툼만 하고 있다"며 "갈등을 중재해야 할 5·18재단은 눈치만 보고 있으니 공법단체 이권 다툼의 뒷바라지만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회장은 "5·18단체가 공법단체로 승격된 이후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 자금 여유가 생기더니 밥그릇 싸움만 더 치열해졌다"며 "각자 입장만 되풀이해 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영향력 있는 인물이나 5·18재단이 나서서 객관적으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재단의 초대 이사장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 또한 "지금의 공법단체들은 5·18때 피흘린 희생을 먹칠하지 말자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각 단체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5·18에 흠이 가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 신부는 "각 단체의 입장을 조율하고 진상규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5·18재단의 역할인데, 재단이 각 단체에 휩쓸려 제 목소리를 못 내는 모양새다"며 "재단은 과감하게 실력을 행사해 분쟁을 조정

하고 뜻을 한 데 모으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재단 측도 "책임은 통감한다"는 입장이다.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는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재단의 역할임을 통감한다"며 "지금의 분쟁을 빠르게 조정 못 해 3개월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2일에는 5·18재단의 제안으로 5·18 공법단체와 시민단체가 광주 전일빌딩에서 비공식 만남을 갖기도 했다. 조 이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도 양 측의 주장은 서로 평행선을 달렸으나, 공법단체 측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조 이사는 "현재 공법단체와 재단 간 관계는 새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함께 협의를 하는 정도"라며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과 관련해 긴밀한 논의를 이끌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13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5·18 43주년 추모 열기 고조

미얀마·베트남인 등 6만여명 민주묘지 참배... 금남로선 범국민대회

5·18민주화운동 43돌을 나흘 앞둔 마지막 주말인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와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추모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남녀 노소 단체로 5·18 묘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5월 영령의 낮을 기리고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전야제와 각종 기념행사를 알리는 분홍색 현수막이 금남로를 가득 메웠다.

국립5·18 민주묘지관리사무소는 14일 미얀마·베트남인 60여명이 단체로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는 등 참배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민주묘지를 다녀간 참배객은 6만46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참배객(2만2463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게 관리사무소 측 설명이다. 올해는 엔데믹 이후 참배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묘지 정문을 통과하기 전부터 민주의 분가지 가로수에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추모의 글귀가 적힌 수천 개의 노란색, 흰색, 분홍색 리본이 참배객들을 인도했다.

이날 자녀들과 경기도 파주시에서 5·18 묘지를 찾은 김혜련(여·48)씨도 "평소 5·18과 4·3사건 등 역사에 관심이 많아 30여년 만에 가족과 함께

아곳에 다시 왔다"며 "내 아이들에게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 먼길을 달려 왔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지역의 참배객들도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알려진 5·18을 참배하기 위해 묘지를 찾았다.

미얀마 출신 전남대 유학생 마웅(여·26)씨도 "민주 항쟁 중에 있는 미얀마는 광주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며 "광주를 보며 미얀마의 민주항쟁도 성공할 수 있을거란 희망을 갖는다"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유족회의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고,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에서는 각종 기념행사와 5·18기념행사의 꽃인 전야제가 진행된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전우원 사죄' 국민 10명 중 6명 긍정 평가

지난 3월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를 찾아 사죄 행보를 한 데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2일 '2023년 5·18인식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여명을 전화로 면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우원 씨의 사죄에 대해 67.5%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31.8%,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35.7%를 차지했으며,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1.7%에 그쳤다.

또 전우원씨 사죄로 향후 기대되는 점에 대해 '전두환 비자금 환수'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18진상규명'(21.8%), '피해자의 명예회복'(21.5%), '다른 가해자들의 고백과 사죄 유도'(18.6%) 등 응답이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0.8%로, 5년 전인 2018년 당시 66.7%보다 4.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5·18기념재단 인지도는 53.2%로 지난해(52.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또 5·18 기념재단이 집중해야 될 사업으로는 진상규명 및 진실알리기(51.9%)가 1순위로 꼽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부상자·공로자회, 광주시장 등 6명 고소 방침

"5·18교육관 위탁운영 공모 개입" 광주시 "규정 근거, 투명하게 진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5일 광주지검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 공무원 등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강 시장이 5·18교육관 위탁운영 사업 공모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려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고, 그 탓에 두 공법단체가 사업 공모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지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월 5·18부상자회를 5·18교육관 위탁운영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는 5·18부상자회에 운영상 전문성 있는 기관과의 컨소시엄 방안, 성과관리방안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해, 보완 서류를 받았음에도 사업 계획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달 재공모에 지원했지만, 광주시는 두 단체 모두 기존 점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적격자 없음' 결론을 내렸다. 광주시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재공모 또는 직접 운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5·18교육관 선정 과정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진행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두 공법단체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정을 근거로 고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후 진행될 5·18교육관 위수탁 관련 업무도 공정정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숙비) 하루 10만원(임대보증금90%이하)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전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